

대학평가의 변화를 통한 글로벌 인력양성

상명대학교 | 장준호*

1. 서론

지난 2008년 12월 1일부터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에 따라 각 대학들이 취업률과 교원 충원률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영국의 대학평가 전문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와 공동으로 아시아권 10개국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QS는 The Times 지와 공동으로 지난 2004년부터 세계 대학경쟁력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는 기관이다. 이미 중앙일보가 매년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으니 이제 대학들은 두 개의 주요 언론사가 발표하는 순위에 일희일비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정부나 언론기관의 대학평가에 대한 명분은 수요자들, 즉 학생, 학부모, 기업들에게 대학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8년 9월 경제전문지인 Forbes 지가 오하이오대학의 경제학자 Richard Vedder 박사와 CCAP(Center for College Affordability and Productivity) 등과 공동으로 미국 내 569개 대학에 대한 순위를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미국 대학교육의 대표적인 순위 평가인 US News and World Report 지의 순위가 너무 오랫동안 독점되어 왔으며, 이러한 순위가 미국 내 일반 가정, 즉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궁금한 평가기준과는 차이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고 한다. 바야흐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으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대학평가 및 대학교육 관련 정보제공의 변화는 비단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UNESCO/OECD는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1-3]. 이는 말 그대로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속에서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이해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OECD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학자들의 이동도 미국에서 약 40%, 유럽지역에서 약 70% 이상이 증가하였다고 한다[4]. 물론 이것은 강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국제적 규범의 성격을 지닌 고등교육 질 보증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평가도구를 시범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대학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8년 이후 대교협의 대학 종합평가를 중심으로, 교원양성기관평가, 학문분야평가, 인증제 평가 등 많은 평가들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대부분 정량적인 평가이며 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대학을 선택하는 예비 대학생 및 학부모, 또한 대학 졸업자를 채용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중앙일보 평가의 경우, 앞서 언급한 평가기준 외에 국제화와 평판 및 사회 진출도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세계적으로 대학의 랭킹을 발표하는 여러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평가기준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의 평가에 있어서도 연구실적, 교육의 질은 물론 졸업생의 평판도를 평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국 The Times 지의 평가가 세계 주요기업의 고용주 설문 및 각국 학자들의 동료 설문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비슷한 방법의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일보는 아시아권 대학평가 결과와 더불어 국내 대학 40위까지의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국내 대학들은 기존 중앙일보 평가 결과는 물론이고 새롭게 발표될 조선일보의 평가에서 기대이상의 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종신회원

이미 상위권 대학들은 세계적인 대학랭킹 발표에서 순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오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대학 랭킹 발표로는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상하이사이통대학의 세계대학 학술역량 순위와 앞서 언급한 영국의 THE(Times Higher Education)와 QS가 2004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세계 대학경쟁력 순위가 있다[5]. 또한,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Newsweek지가 상하이사이통대학의 순위 평가기준의 일부와 The Times지의 순위 평가기준 일부를 취하고, 거기에 대학도서관 장서량을 추가한 기준을 토대로 세계 대학의 순위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세계대학 순위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아직까지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의 대학들에 비해 낮은 순위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들이 서양, 특히 미국의 대학들에게 유리한 평가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노벨상 수상자 등에 있어서 일본 등의 국가에 비해 불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에서 순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국제적으로 대학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대학 순위발표는 아직까지는 국내 상위권 대학들의 관심사일 뿐이다.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은 대교협이 평가나 중앙일보 평가의 순위를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대학들은 이제 자국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펼치거나 자국에서만 활동할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만을 목표로 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대학에 진학할 인구수는 날로 감소하고 있다. 2007년 현재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입학정원은 346,720명, 대학유형별 입학정원은 665,916명으로 이 수치는 현재의 출산율을 기준으로 볼 때, 2015년을 기점으로 입학정원이 만 18세 인구보다 많아지며, 그 결과 2030년부터는 4년제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전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가야만 한다. 또한, 졸업생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여 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국제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는 최근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이자 개별 대학의 목표가 되어 가고 있다[3].

2절에서는 대학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의 유형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러한 유형 중 어느 부분에 선택과 집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본다. 3절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써 제시되고 있는 UNESCO/OECD의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 4절에서는 아시아권 국가들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국제화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2009년부터 시작될 조선일보의 아시아권 대학 평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5절은 결론으로서 대학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력양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대해 언급한다.

2. 대학교육의 국제화

대학교육의 국제화는 대학교육의 목적, 교수, 학습, 연구, 서비스, 조직에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요소들이 통합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의 국제화와 이와 관련된 시스템과 운영성과가 국제적 수준과 역량을 갖도록 하는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6].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국제화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학교육의 시스템이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자체 대학교육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표 지향적 활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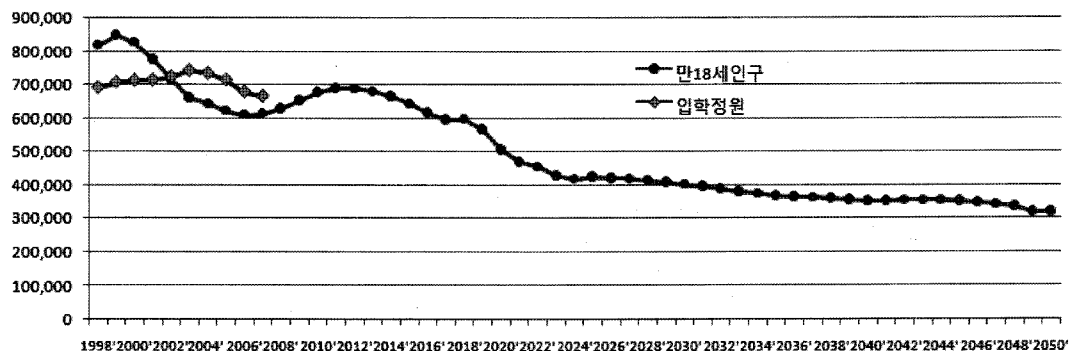


그림 1 만 18세 인구추이와 입학정원

볼 수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 유형은 그 내용에 따라 규범형, 국가 수준형, 실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형은 다시 목표 지향형, 지표 조작형, 지표 사실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범형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ENQA의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 2005’와 OECD/UNESCO의 ‘UNESCO/OECD Guidelines on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 2005’ 등이 있다. 이들 지침은 국제적 규범의 성격을 지닌 고등교육 질 보증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수준형은 국가단위의 대학교육 경쟁력을 제시하는 ‘IMD 대학교육의 경제발전 기여도 순위’, ‘OECD 고등교육 관련 지표’ 등을 들 수 있으나 개별 대학관점에서 보다는 국가 정책차원에서 의미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목표지향형은 나름대로 국제적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그 충족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육에 대해 상호인정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으로서, 미국공학교육인증원(ABET)를 주축으로 현재 영국, 호주, 일본 등 12개국을 정회원으로서 하는 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 공과대학 졸업생의 실질적 동등성을 보장하는 국제협약)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에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지표 조작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The Times 지, 상하이자이통대학, 미국의 뉴스위크지 등이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서 세계 100대, 200대, 500대 대학의 순위 제시가 그 유형이라 하겠다. 이들 세계 대학의 랭킹 시스템은 나름대로 8~10개 정도의 정량 평가지표를 사용하며, 각 평가지표에 대해 일정한 기준의 가중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각 평가지표별로 그 수준이 가장 상위에 있는 대학을 100으로 하여 대학별 해당 지표값을 환산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개별대학의 실제 수준을 알기 어렵다. 지표 사실형은 대학교육의 시스템과 운영방식을 구성하는 제 요소의 실제적 수준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주는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는 개별 대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우수 대학의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중 소위 지표조작형 대학랭킹 발표가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연히 일반인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순위이기 때문이다. 상하이자이통대학의 순위

는 매년 변동이 조금씩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버드대학을 비롯하여 20위권에는 대부분 미국과 영국의 대학이 포진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아시아의 동경대학이 20위권에 포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50위권 바깥에 8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동문이나 교수 중 노벨상이나 필즈(Fields)상을 받은 자가 한명도 없으므로 상위권에 진입하기가 애초부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하이자이통대학의 연구역량평가는 최고 대학에 대비한 상대적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최고 대학의 수준이 다른 대학보다 월등할 경우 나머지 대학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범위한 분야를 통해 활발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나, 영어권 국가의 대학, 과학 활동이 활발한 대학 등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논문에서 미국인이 미국인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 내 대학이 유리하며, 노벨상 수상자 중 대부분이 세계은행이 규정한 부유한 국가 출신이므로 이러한 국가들이 더욱 유리하다.

영국의 THE(Times Higher Education)와 QS가 2004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세계 대학경쟁력 순위는 하나의 연구 분야에만 집중하지 않는 랭킹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제화 수준에서 기관의 명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특히, 이 랭킹은 영국 대학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경은 넘는 학위(cross-border) 서비스 시장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명성에 치중하는 조사이어서 결과적으로 상하이자이통대학의 랭킹과 비교해 볼 때, 상위권 영국 대학의 상위 랭킹 진입 수를 늘리고 세계 100위권의 미국 대학을 50여개에서 30여개로 줄이게 되었다. 또한, 조사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누가 조사했고,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절에서 살펴본 대학의 글로벌 스탠다드 유형 중 어느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위권 대학들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평가결과일 수 있다. 결국 대학마다 국제화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표가 향후 그 대학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지표조작형 순위발표에서 대학의 국제화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는 외국인 학생이나 교수의 비율이다. 대학이 국제화되어 간다면 당연히 이러한 비율이 높아질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매우 타당한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표조작형 대학평가인 중앙일보 평가의 경우 국제화 부문의 평가기준으로서, ‘외국인교수비율’, ‘학위과정등록 외국인학생비율’, ‘국내방문 외국인교환학생비율’, ‘해외파견 교환학생비율’, 그리고 ‘영어강좌비율’이다. 사실 대학이 국제화되었다는 것은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화된 대학은 결과적으로 중앙일보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적절한 결과값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이러한 평가지표 향상을 목표로 해당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즉, 그러한 평가기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필요조건들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의 국제화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지표들의 값을 단기간에 높이려는 노력은 자칫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대학의 순위는 각국의 초일류 대학들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대학들의 관심사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지표조작형 순위보다는 목표 지향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 대학들에게는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공학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교육에 대한 상호인정은 FTA 등과 같은 국가간 무역 협정이나 국경을 넘는 취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자리잡아 가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8년 12월에는 컴퓨터 및 정보기술 분야 대학교육에 대한 국제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어코드가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6개국 이 창립 회원이 되었다. 서울 어코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국제 협약의 출범을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추진함으로써 세계 IT 강국으로서 해당 분야 대학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즉, 교육의 내용과 방법, 다양한 교육 관련 프로세스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화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3.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

3.1 논의의 배경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논의는 꽤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져 왔다. 이는 1960년대에 UNESCO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자격인증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UNESCO Conventions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의 기준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원)생들과 전문가들(professional)들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자국에서 획득한 자격이나 학위를 별도로 인증 받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명서 및 학위에 대한 상호 인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1993년 제2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고등교육 이수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국제적 권고안(International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이 채택되었으며,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와 OECD의 교육위원회에서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4년 6개 영역(정부, 고등교육기관, 학생단체, 질 보장과 인증기관, 학위·자격인정기관, 전문단체)을 위한 가이드라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3차에 걸친 회의가 파리와 도쿄를 오가며 진행되었고, 드디어 2005년 하반기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확정, 2005년 10월 OECD 교육위원회와 12월 OECD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강제적 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OECD 회원국간에 상호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행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2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은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대학 등 이해관계기관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은 국가 간 고등교육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를 여섯 개(정부, 고등교육기관, 학생단체, 질 보장과 인증기관, 학위·자격인정기관, 전문단체)로 분류하고, 단체별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은 교육수입국과 수출국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국의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는 모든 형태의 국경을 넘는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이 질적 측면에서 자국 내의 교육과 국경을 넘는 교육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대학 자체 및 외부 질 보장 체제를 갖추는 것이며, 둘째는 질 보장과 관련된 활동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셋째는 해당 지역 또는 국제적으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각 영역에 대한 권고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

- 자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관에 대해 인허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CBHE: Cross-Border Higher Education)’의 질 보장과 인증을 위한 포괄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CBHE에 대한 인허가, 질 보장·인증에 관한 기준과 그 결과가 학생, 대학 및 프로그램 등의 재정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UNESCO 자격인증 관련 지역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국가 정보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 자격 인정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약을 추진하며, 고등교육기관·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국내외에서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고등교육기관(대학)

- 국내외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준을 같게 하며, 교육 수입국의 문화적·언어적 다양성과 질 보장 및 평가인증 체제를 존중하여야 한다.
- 현행 질관리 체제를 점검하고, 수여 학위가 국내 외적으로 일정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내외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자격인증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교육서비스의 제공방식과 자격인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UNESCO와 유럽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야 한다.
- 대내외적인 질 보장 및 학위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학생

- CBHE의 질 유지, 통제 등에 있어서 대학,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추진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CBHE에 등록할 경우 대학, 질 보증 기구를 통해 해당 기관의 평가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질 보장 기구

- CBHE를 질 보장 및 인증 평가체제에 포함시키고,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인증에 관한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 교육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질

보장 및 평가인증 시스템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절차, 질 보장 체제가 학생,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UNESCO와 유럽위원회의 질 보장과 평가와 관련된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른 평가인증기구들과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고, 내부 질 보장 시스템을 개발하며, 정기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학위·자격 인증 기구

-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질 보장 및 평가인증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학위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는 과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 관련 주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학문 분야와 전문 분야 학위인증 평가 방식간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 국제 노동시장의 확대와 국제적 인력 이동을 고려하여 외국 학위·자격증 소지자와 고용주들에게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정되는 학위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인증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학위 및 전문자격 인증에 관한 유럽위원회·UNESCO의 권고 등을 따르고, 학위평가 준거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전문단체

- 취득 학위에 대한 인증이 용이하도록 국내외 학위취득자나 고용주들에 대한 정보채널을 구축하여야 한다.
- 자격 인증에 있어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프로그램이나 학위를 비교할 수 있는 평가 준거 및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 전문직의 상호인증협약 정보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3.3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강제적 규범이라기보다는 비강제적 연성 규범(non-binding soft law)이지만, UNESCO와 OECD 회원국 간에 동료 압력(peer pressure) 행태를 갖게 되므로 사실상 이행이 강제된다고 할 수 있다[7]. 또한,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특정국가의 고등교육 질 관리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회원국들은 가이드라인을 이행함에 있어서 타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UNESCO나 OECD의 특성상 회원국 간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므로 개별국가의 질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국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상호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이행주체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등교육기관, 질 보장과 인증기관, 학위·자격인정기관 등이다. 첫 번째 그룹은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서비스 시장에서 공급자적 지위를 갖으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위·자격에 대한 상호인증을 추진하며,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적·국제적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두 번째는 학생단체와 전문가 단체로서 이들은 수요자적 지위를 갖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그룹은 첫 번째 그룹에 속한 기관들이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지를 점검할 의무가 권고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정부로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칙을 정하는 조정자(coordinator)이자 규제자(regulator)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질 보장을 위한 규제를 담당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3.4 시사점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대학차원의 질 관리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학생 선발시 외국 학위(또는 학력)에 대한 인정 방법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절에서 언급했던 목표지향형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공학분야의 국제적 동등성 인정을 위한 인증제도가 오히려 유네스코와 OECD가 제안하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매우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공학교육인증제도는 각국의 자주적 결정 권리에 대한 존중보다는 상호 모니터링을 통해 서로 등가성을 인정할 수준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학분야의 경우,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확산을 통해서 이러한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포함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네스코/OECD의 가이드라인이 지향하고 있는 해당국의 자주적 결정 권리에 대한 국가간 양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제도 관점에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난 몇 년간 공학교육인증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되면서 국내 대학의 공학교육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나 국내 대학교육의 현실, 우수한 평가위원의 부족, 평가 문화의 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체제 및 인증기준 적용의 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학의 요구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4. 아시아권 국가들의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

일본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학이 변하면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과감한 대학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국제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학생 10만 명 유치라는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한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시 대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은 “학문 연구나 기술 개발에서 2등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방침에 따라 중국은 ‘과학흥국(科學興國)’의 모토를 세우고 실용주의 노선을 철저히 시행하는 고등교육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싱가포르도 아시아 지역의 교육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10개 대학 유치를 위한 10년 계획(1998~2007)을 추진해 왔다. 말레이시아도 국제화 교육에 주력하면서 연간 1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4.1 동아시아권 국가들의 노력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아시아 지역 내 경쟁도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중·일 3국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대학개혁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따라서 저마다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학개혁의 성패는 향후 글로벌 대학경쟁력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될 것이다. 한국·일본·중국 3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개혁의 방향은 사실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은 세계적인 대학 육성을 기치로 우수인력 양성에 많은 예산을 사용해오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 양성에 국가경쟁력이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

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통·폐합 추진도 공통점이다. 한국이 1999년부터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K 21 사업'과 중국의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해 중점학과를 집중지원 하는 '211 공정', 1998년부터 칭화대, 베이징대 등 소수 정예 대학을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958 공정', 그리고 두 나라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일본이 2002년부터 세계적인 연구교육거점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는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사업'도 비슷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는 일본판 BK21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규모는 2002년 182억 엔, 2003년 334억 엔, 2004년 367억 엔, 2005년 382억 엔 등으로 해마다 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다[8].

중국은 지난 8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대학평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현재는 교육 여건 개선과 고등교육 질 보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 대학평가의 법제화, 규범화, 과학화 부문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1998년 8월 29일)' 등 중국의 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법에는 "대학의 교육 수준, 교육의 질은 교육행정 부문의 감독 부문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대학평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제4장 제23조, 제44조). 이에 근거하여 중국에서는 '신설 대학 합격 평가', '학부 교육 수준 평가', '대학원 학문 분야 순위평가', '우수대학 선정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있다. '958 공정'으로 집중 투자되고 있는 소수 정예 우수 대학의 선정도 '211 공정' 과정에서 실시된 대학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5].

일본에서는 최근 종래의 학위인정 수여기구에 대학 평가 기능을 부여하여 독립 행정법인 형태의 국가기구로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IAD-UE : 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 and University Evaluation)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학교법 제2조를 개정하여 대학자체평가와 제3자 평가를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대학의 자체 진단 및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학생 및 기업체들에게 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은 대학평가에 근거한 철저한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대학평가를 시행하

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를 대학경쟁력 강화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대학평가가 자율적 질 관리라는 소극적이고 수세적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글로벌 대학경쟁력을 지닌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우리를 추월한 중국 역시 대학평가를 근거로 하는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2 조선일보-QS 아시아권 대학평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일보는 영국의 QS와 함께 2009년 5월 아시아권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실적, 교육의 질, 그리고 졸업생 평판도의 네 분야에 대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순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홍콩 별도 평가)·일본·싱가포르·대만·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 등 10개국 주요 대학들이다. 평가는 QS가 실시하고 있는 세계대학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지만, 아시아권 대학 평가는 아시아 각국 대학의 연구 실적과 졸업생 수준을 잘 알고 있는 아시아 각국 전문가들이 학계 평가와 기업 평가에 대거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연구 실적 분야에서는 '학계 전문가 평가' '교수 1인당 인용 횟수'가 주요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아시아권 대학 평가에서는 세계 최대 논문 초록 및 인용 횟수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푸스'(Scopus)를 활용해 최근 5년간 교수 1인당 논문 인용 횟수를 계산해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교육의 질 분야에서는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쓰인다. 국제화 수준 분야에서는 각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 비율'과 '외국인 학생 비율'을 평가하게 된다. 각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후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졸업생 평판도에서는 '주요 기업 인사관리자에 의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가 산출된다. QS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고용자 리스트와 언론 및 각 대학에서 추천한 고용주들도 평가단에 포함된다.

한국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 한국 대학 상위 40위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들이 아시아권 대학과 비교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직·간접적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매우 관심 있는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권 국가의 주요대학에 대한 평가는 아시아 국가 간 대학들의 경쟁을 더욱 가열화 시킬 것이 자명하며, 이러한 분위기는 각국의 대학평가와 관련된 정책방향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의 대학평가 전문기관인 QS의 경우, 추후 평가기준에 학생 만족도를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중심의 평가와 함께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5.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3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대학의 경쟁력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대학 간 경쟁을 가속시키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이 더 이상 대학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자율적 교육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수, 졸업생 및 고용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감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더욱이 날로 가속화되어 가는 글로벌화는 대학으로 하여금 자국 내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체적인 질 관리의 능력을 국제적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대학교육의 목적, 교수, 학습, 연구, 서비스, 조직을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요소들이 통합되도록 하여 대학의 시스템과 운영성능이 국제적 수준과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같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는 없다. 대학별로 국제화를 통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택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UNESCO/OECD의 가이드라인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교육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여 회원국 간의 고등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의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모든 국제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대학의 순위는 각국의 초일류 대학들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대학들의 관심사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일반 대학들에게는 국제적인 협의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목표지향형 글로벌 스탠다드의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FTA 등과 같은 국가간 무역 협정이나 국경을 넘는 취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갖추어지게 되는 다양한 프로세스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통해 자국인과 외국인이 학생 또는 교수로서 큰 혼란 없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목표지향형 글로벌 스탠다드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학교육인증제도이다. 특히 고등교육의 국제적 질 관리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6개 영역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의무가 이 제도의 틀 안에 잘 집약되어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지난 10년간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08년에만 40여개 대학의 300여개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대학들에 대한 인증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과 피평가자인 대학들 사이에는 혼란과 갈등 또한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착되어온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불과 몇 년 만에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공학 특히 컴퓨터정보기술과 같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분야에서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탄생이나 학문 분야간 융복합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상위권 대학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오고 있다. 반면 평가기관은 평가의 잣대를 비교적 보수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차이에서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도 MIT 등과 같은 상위권 대학들과 미국 공학교육인증원(ABET)과의 갈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간의 이해와 노력이 오늘날 90% 이상의 대학들이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UNESCO/OECD의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 학생, 대학, 질 보장 기구 등은 물론 학위·자격인증기관 및 전문단체들의 책임과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학회가 교육 및 연구는 물론 교육인증 및 자격인정 등등의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같은 질 보장 기구의 이사회가 관련 학문분야의 학회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책임과 의무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질 관리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학회의 책임과 의무가 좀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공학교육인증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산을 위한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까지도 기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 [1] OECD, Quality and Recognition in Higher Education: The Cross-border Challenge, Paris: OECD, 2004.
- [2] OECD, Internationalization and Trade in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 Challenges, Paris: OECD, 2004.
- [3] 이병식, 채재은,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 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교육행정학연구, 제24권, 제1호, pp. 267~288.
- [4] Uvalic-Trumbic, UNESCO Conventions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Regional Frameworks in a Global Context, In OECD.(ed), Quality and Recognition in Higher Education, Paris: OECD, pp. 143~154.
- [5] 이영호, “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대학경쟁력과 대학평가”, 대학교육, 제146호, 2007.
- [6] 강성진, “대학의 국제화: 글로벌 스탠다드란 무엇인가”, 대학교육 5-6월호, 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 [7] 채재은, “국가간 경계를 넘는 고등교육 서비스 공급의 질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교육정책포럼, 97호, pp. 29~32.
- [8] 日本文部科學七省(2006). 文部科學白書.



장준호

1990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학사

1992 서울대학교 전산학 석사

1998 서울대학교 전산학 박사

1998~2003 i2 Technologies 이사

2003~현재 상명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2004~2006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인력양성사업단장

2007~현재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사무부처장

관심분야 : Enterprise SW, RFID/USN Middleware, 인력양성정책

E-mail : jchang@smu.ac.kr

제3회 패턴인식 겨울학교

- 일 자 : 2009년 2월 11~12일
- 장 소 : 고려대학교
- 주 관 : 컴퓨터비전및패턴인식연구회
- 상세안내 : <http://media.pknu.ac.kr/prws2009/>